

보도 일시	2022. 5. 4.(수) 16:00	배포 일시	2022. 5. 4.(수) 14:00
담당 부서	공공정책국 공공안전정책팀	책임자	팀장 김택수 (044-215-5670)
		담당자	사무관 김동욱 (dong3847@korea.kr)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최종 확정
- 공공기관 안전관리 수준 전년보다 전반적으로 개선 -
"2등급(양호) 3개 기관, 3등급(보통) 2개 기관 증가"

- 기획재정부는 5월 4일(수) 10:30 안도걸 제2차관이 주재하는 제5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를 심의·의결하고 등급을 최종 확정하였다.
-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는 건설현장, 작업장, 시설물 및 연구시설의 위험한 작업 환경을 가진 공공기관의 안전수준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맞춤형 컨설팅, 교육 등을 통해 기관의 실질적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사회 전반의 안전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2021년 최초로 실시하였고, 금년이 두 번째이다.

< '21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개요 >

- (심사대상)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대상 사업·시설 중 근로자 및 이용국민에 대한 안전관리가 중요한 99개* 기관
 - * 공공기관 유형별 : 공기업(31개), 준정부기관(27개), 기타공공기관(41개)
- (심사내용) 4대 위험요소(작업장·건설현장·시설물·연구시설) 중 1개 이상을 보유한 공공기관의 안전역량·안전수준·안전성과를 종합 심사*하여 기관별 안전등급** 부여
 - * 심사배점 : 안전역량(300점) + 안전수준(450점) + 안전성과(250점) = 1,000점 만점
 - ** 5단계 : 1등급(900점 ↑), 2등급(800점 ↑), 3등급(700점 ↑), 4등급(600점 ↑), 5등급(600점 미만)
- (심사절차) 안전관리등급 심사단*을 구성(1월)하여 서면심사와 현장검증, 이의신청·검토를 거쳐 등급을 '결정'하고, 공운위에서 최종 '확정'
 - * 정부위원(단장 : 기재부 2차관, 고용부·국토부·과기부 1급) + 민간위원(32명)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의 특징

- ① 금년 최초로 등급 심사 결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 * 재난 및 안전관리 : 사이버 보안, 재난 및 산업재해 예방 노력,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등으로 구성(비계량 4점)
 - 공공기관에서 안전 능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도록 유도하고, 심사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개별 안전평가와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였다.
 - 심사단의 약 50%를 고용부 안전활동 수준평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개별 평가와의 연계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
 - 건설현장 심사 지표 수를 줄임으로써(44개 → 32개, 중복지표 통합·간소화) 기관의 심사 부담을 완화하였다.
- ③ 현장검증을 전 기관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의 안전활동 작동 상태를 심사하기 위해 기관별 작업현장은 무작위(Random) 방식**으로 선정하였다.
 - * (20년도) 46개 기관 → (21년도) 99개 심사대상 전 기관
 - ** ①현장검증 일주일 전에 기관에 대략적인 일정 공지 → ②기관이 보유한 모든 작업현장의 상시 안전활동 작동 유도 → ③방문 1일 전 대상 현장 및 세부 일정통보
- ④ 사고사망 감소 '노력도' 심사지표를 신설하여
 - 산재 사고사망 증감에 대한 계량 심사와 함께 사고 감소노력을 비계량 심사하여 중대재해 예방 노력을 유도하였다.
 - * '20년도 : (계량) 사고사망 발생 0점, 미발생 90점 → '21년도 : (계량) 40점, (비계량) 노력도 50점
- ⑤ 전년도 심사 결과 제기된 개선 필요과제 이행여부를 심사함으로써 기관의 지속적인 안전능력 향상 노력을 견인하였다.
 - * (전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를 통한 개별 기관의 개선과제 발굴 및 개선의무 부과 (당해년도) 안전관리등급 심사 시 이행 여부 점검 및 심사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 **[종합]** 99개 공공기관에 대한 심사결과, 종합등급 2등급(양호) 11개(11.1%), 3등급(보통) 59개(59.6%), 4등급(미흡) 26개(26.3%), 5등급(매우 미흡) 3개(3.0%)로 심사되었다.

* 3등급(보통) 이상 기관이 70개로 70.7%, 4등급(미흡) 이하 기관이 29개로 29.3%

○ 전년 대비 2등급은 3개 기관(8→11개), 3등급은 2개 기관(57→59개)이 증가했고, 4등급은 5개 기관(31→26개)이 감소하는 등 전반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을 앞두고 사회 전반적으로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안전관리등급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심사 결과를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함에 따라,

- 각 공공기관 경영진 및 직원의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와 경각심이 긍정적으로 작동한 결과로 해석된다.

- 다만, CEO부터 최일선 현장 근로자까지 "구성원 전체의 안전관리 참여가 일상화(전사적)되어 있고, 안전 활동이 매우 잘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 여야만 달성할 수 있는 1등급 기관은 제도 시행 2년차인 만큼 아직은 없었다.

[안전관리 종합등급 (전년대비)]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20년도(A)	98	-	8 (8.2)	57 (58.2)	31 (31.6)	2 (2.0)
'21년도(B)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증감(B-A)	1	-	+3 (2.9)	+2 (1.4)	-5 (-5.3)	+1 (1.0)

* 2등급(11개) : 신규 2등급 3개(한국기술교육대, 한국중부발전, 한국재료연구원) + 2년 연속 2등급 8개(국민체육진흥공단, 남부발전, 동서발전, 산업단지공단, 석유공사, 원자력연구원, 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 **[등급등락]** 전년대비 등급 상승기관은 26개(26.2%), 하락기관은 20개(20.2%), 등급 유지기관은 51개(51.5%)로 심사되었다.

○ 전방위의 개선 노력을 통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전년 대비 3등급 상승하였고, 한국중부발전과 한국재료연구원은 2등급 상승한 것이 돋보인다.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안전조직(안전관리처, 7명) 신설을 통한 안전책임경영체계 강화, 경영진(총장 등) 전원 위험성평가 교육 이수 및 원·하청 상생* 등 실질적 안전역량 향상에 노력하고, 기관의 특성을 살려, 학생·임직원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집중하여 3등급 상승(5 → 2등급)

* 수급업체 근로자 비상상황 대응 체계(SMS 전송) 운영 및 안전인프라 지원 등

** 학생이 참여한 안전공모(포스터, 웹툰, 수기 등) 수상작 게시 활용, 위험상황신고(Safety call) 및 아차사고(다칠 뻔한 사고의 전조 증상) 적극 발굴·공유를 통한 예방문화 조성 등

▶ **(한국중부발전)** 안전작업허가제도*, 위험작업 거부·신고제도 및 실시간 현장 안전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한 안전관리 실행력 강화 혁신 노력 등이 높이 심사되어 2등급 상승(4 → 2등급)

* 8대 고위험 작업(용접 등)에 대해 위험성 사전 검토·조치 확인을 통한 작업 허가

** 위험요인 발견 시 모바일을 통해 즉시 신고·조치하는 확인시스템(안전talk) 운영

▶ **(한국재료연구원)** 경영진부터 수급업체 근로자까지 참여하는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환류하고, 자체 안전체험교육장 구축을 통한 안전의식 제고 노력 등이 높이 심사되어 2등급 상승(4 → 2등급)

* 경영진이 참여하는 안전 점검(분기별 1회)을 실시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강화

○ 반면에,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전년 대비 2등급, 한국국토정보공사·한국광해광업공단 등 19개 기관은 1등급 하락하였다.

[공공기관 유형별 안전관리 종합등급 변동 현황 (전년대비)]

(단위: 개)

구 분	기관수	등급 상승(+)				등급 유지	등급 하락(-)			신규 대상 기관
		소계	+3 등급	+2 등급	+1 등급		소계	-1 등급	-2 등급	
계	99	26	1	2	23	51	20	19	1	2
공기업	31	8	-	1	7	18	5	5	-	-
준정부기관	27	5	-	-	5	16	6	5	1	-
기타공공기관	41	13	1	1	11	17	9	9	-	2

□ **[위험요소별]** 연구시설(75.7%)이 작업장(65.8%)이나 건설현장(66.6%) 보다 3등급(보통) 이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 연구시설은 전년도 심사 이후 주무부처와 기관이 연구실 안전수준 개선 노력에 집중하여 높게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 작업장 위험요소에서만 5등급 3개 기관이 나온 것이 특징인데, 3개 기관 모두 안전책임경영 활동 부진, 전년도 개선 권고과제 이행 부실, 위험설비 안전장치 미설치 등 안전역량과 안전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심사되었다.

[위험요소별 종합등급 결과]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계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작업장	38	-	5 (13.2)	20 (52.6)	10 (26.3)	3* (7.9)
건설현장	12	-	1 (8.3)	7 (58.3)	4 (33.3)	-
시설물	12	-	2 (16.7)	7 (58.3)	3 (25.0)	-
연구시설	37	-	3 (8.1)	25 (67.6)	9 (24.3)	-

* 대한석탄공사, (재)우체국물류지원단, 한국어촌어항공단

□ **[공공기관 유형별]** 모든 유형에서 3등급 비율(59.6%)이 높게 나타났으나, 공기업은 타 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2등급*(양호) 비율(19.4%)이 높았다.

*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 KPS

- 이는 공기업이 건설현장 등 위험요소를 다수 보유하고 있음에도 대부분 대형 SOC·에너지 기관으로 CEO의 안전경영의지, 전담조직체계 구축, 안전투자 등이 상대적으로 양호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공공기관 유형별 종합등급 결과]

(단위: 개, %)

구 분	기관수	1등급(우수)	2등급(양호)	3등급(보통)	4등급(미흡)	5등급(매우미흡)
계	99	-	11 (11.1)	59 (59.6)	26 (26.3)	3 (3.0)
공기업	31	-	6 (19.4)	17 (54.8)	7 (22.6)	1 (3.2)
준정부기관	27	-	2 (7.4)	15 (55.6)	9 (33.3)	1 (3.7)
기타공공기관	41	-	3 (7.3)	27 (65.9)	10 (24.4)	1 (2.4)

① **[공기업]** 31개 기관 중 2등급 6개, 3등급 17개, 4등급 7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심사되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2등급 6개 기관은 안전경영체계가 잘 구축되어 있고, 실제 작업현장에서 안전 활동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어 양호하게 심사되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경영진 주도의 현장안전점검 실시(5회) 및 안전인력 보강 등을 통한 안전책임경영체계 강화, 수급업체를 포함한 아차사고 제안제도* 운영, 위험상황 경보체계 시스템 구축**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노력 등 안전관리 활동 내실화

* 아차사고 제안-조치 활성화('19년 68건→ '20년 122건→ '21년 347건)

** 수송관 4,400Km에 이르는 구간에 대한 생산→수송→공급의 전 과정에 걸쳐 빅데이터 기반의 ICT융합 안전관리 체계 구축·운영

② **[준정부기관]** 27개 기관 중 2등급 2개, 3등급 15개, 4등급 9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심사되었다.

- 2등급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주 심사대상이 시설물로 안전역량 및 안전수준 등 전 부문에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산업단지공단)** 현장의 안전활동 실행력 제고를 위해 본사와 사업본부별 안전경영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이행여부를 경영진이 직접 점검하고, 시설물 사고 발생 대응체계 구축 및 사고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하여 사고 대응능력 강화

③ **[기타공공기관]** 41개 기관 중 2등급 3개, 3등급 27개, 4등급 10개, 5등급 1개 기관으로 심사되었다.

- 2등급 3개 기관(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은 실제 현장에서 안전 활동이 양호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심사되었다.

▶ **(한국원자력연구원)** 다양한 안전관련 법령을 적용받는 원자력 연구의 특수성에 따라 연구 환경 및 시설에 적합한 안전관리 분야별 안전관리* 및 화학물질관리시스템** 구축·운영하고, 근로자 작업중지 요청 및 위험상황 신고 제도 도입·운영을 통한 실효성 높은 안전관리 활동 강화

* 연구원에서 이루어지는 안전활동을 종합적으로 관리·시행할 수 있는 P(계획)-D(실행)-C(점검)-A(활용)에 기반한 연구실 안전관리정보망 구축·운영

** 다품종을 소량 취급하는 실험실의 화학물질을 데이터화하여 화학물질사용 전 과정(Life-Cycle)에 걸쳐 화학물질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

후속 조치

□ 심사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로 **종합 안전등급 또는 위험요소별 안전등급이 4·5등급을 받은 기관(29개)**은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제 운영에 관한 지침」 제22조에 따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 ①심사 결과보고서에서 제시한 개선사항 이행, ②안전 전문기관(안전보건공단 등)을 통한 컨설팅 실시, ③경영진 안전혁신 교육 및 안전담당 직원의 안전교육 이수 등

□ 정부는 안전관리등급 심사가 일회성이 아닌 기관의 자발적인 안전수준 향상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이 도입 취지인 만큼, **공공기관의 안전 문화 정착 및 안전수준 향상을 위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① **(이행점검)** 안전전문 공공기관을 통해 개선과제 **이행점검***을 실시하여 기관별 개선 필요 과제의 조기 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

* 4등급 이하 기관(~22.8월), 3등급 이상 기관(22.9월~)

※ 개선조치 이행 실적을 점검하고, 다음 연도 안전관리등급 심사에 반영

② **(경영진 교육)** 전년도*와 달리, 올해는 **선제적으로 상반기에 안전관리 등급심사 대상 전 기관(99개)의 경영진 안전혁신 교육을 시행**** 중이며,

* (21년) 미흡기관 33개 + 자발적 참여 32개 → (22년) 심사대상 전 기관 99개

** (CEO 과정 完) 4.13~4.27(7회), (상임이사 과정 진행 중) 5.3 ~ 5.19(9회)

○ 심사 결과, 등급 하위기관(29개)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과정을 안전보건 공단에 위탁하여 하반기(9월)에 개설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③ **(직원 교육)** 금년 최초로 안전부서 직원의 전문성 향상 교육과정*도 운영 중이며,

* 실습·체험위주 콘텐츠로 구성(2박 3일 집체교육)하여 12월까지 연 1,100여명 수료 예정

○ 심사 결과, 등급 하위기관(29개)의 안전부서 직원은 6월 교육부터 우선 신청을 받아 단계적으로 교육해 나갈 예정이다.

④ **(맞춤형 컨설팅)** 등급 하위기관, 사망사고 감소성과 미흡기관, 신규기관 등*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여 실태파악, 문제점 발견, 개선대책 제시 등 체계 전반에 관한 조언 및 해결책(Solution)을 제시할 계획이다.

* 43개 기관을 대상으로 5월중 신청을 접수하여 6월부터 실시 예정

⑤ **(안전신호등)**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높은 다수 건설현장을 보유한 도로 공사(80개소)에 공정별 실시간 「안전관리 상황판*」 체도를 도입·시범 운영 중이며,

○ 시범 운영효과 등을 분석하여 유사 건설현장 보유 주요 공공기관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 경영진이 현장별 위험수준을 인지·관리하도록 3색으로 실시간 표출

□ 안도걸 차관은 금년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가 처음으로 공공기관 경영 실적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각별히 노력했다면서,

○ 안전이라는 문제는 단(短)시간에 단(單) 한 번의 조치와 실행으로 안전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에, 심사 결과 개선이 필요 부분에 대해 빠짐없이 개선할 수 있도록 이행점검, 교육, 컨설팅 등 차질 없는 후속 조치의 이행을 주문하였다.

○ 특히, 조직규모나 예산의 한계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역량이 취약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이행 뿐만 아니라 안전 인력이나 예산 지원 등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 또한, 금일 확정되는 기관별 안전등급의 대국민 공개를 통해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안전수준 향상 및 안전문화 확산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 앞으로도 정부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안전 대책들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독려해 나가고, 추가로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항상 고민하고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참고 1]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참고 2]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단 명단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2021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심사 결과

등급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계	31개	27개	41개
1등급	-	-	-
2등급 (11개)	한국남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석유공사 한국중부발전(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전KPS(주) (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산업단지공단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재료연구원 (3)
3등급 (59개)	(주)에스알 (주)한국가스기술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남동발전(주) 한국도로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서부발전(주)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조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전KDN 해양환경공단 (17)	공무원연금공단 국립공원공단 근로복지공단 시청자미디어재단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석유관리원 한국소방산업기술원 한국수산자원공단 한국승강기안전공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환경공단 (15)	국방과학연구소 극지연구소 기초과학연구원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세계김치연구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코레일유통(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계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나노기술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표준과학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27)
4등급 (26개)	(주)강원랜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한국관광광업공단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7)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국민연금공단 도로교통공단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한국에너지공단 (9)	광주과학기술원 나노종합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안전성평가연구소 울산과학기술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신규)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10)
5등급 (3개)	대한석탄공사 (1)	(재)우체국물류지원단 (1)	한국어촌어항공단(신규) (1)

